



연합뉴스 '혁신 요구' 속 제30대 노조 출범 홍제성 신임 위원장 "적폐 청산, 공정보도·편집권 독립 실현할 것"



(왼쪽) 지난달 25일 제30대 연합뉴스 노조 출범식에 참석한 내외빈들

(앞줄 왼쪽부터)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홍제성 연합뉴스 신임 노조 위원장·이주영 연합뉴스 전 노조 위원장·윤창현 SBS 노조 본부장)

(오른쪽) 연합뉴스 30대 노조 출범식에서 지부 깃발을 흔드는 홍제성 신임 노조위원장

연합뉴스 안팎에서 적폐청산과 혁신 요구가 비등한 가운데 노동조합 제30대 집행부가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4월 25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미디어그룹 17층 다목적홀에서는 노조 30대 집행부 출범식이 열렸다.

홍제성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중심을 잡고, 견제세력으로서 노동조합 본분을 다하겠다”라면서 “조합원 총의를 모아 싸울 때는 싸우고, 협력할 때는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특히 “연합뉴스는 새로운 경영진을 맞아 새로운 출발선상에 있다”라면서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보도와 편집권 독립을 실현하는 동시에, 혁신과 개혁으로 회사 미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함께 구성할 이른바 ‘혁신위’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필요할 때는 견제도 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위원장은 ‘함께 가는 노조’를 내걸면서 근로조건 개선, 사원복지 확충, 직군·지역간 차별 해소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주영 전임 위원장은 박노항 경영진과 대치했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조성부 사장 이하 경영진은 노사가 대립이 아니라 국민 앞에 당당한 연합뉴스를 만든다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갈 수 있음을

증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성부 사장과 김환균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 출범식에 사장이 참석한 것은 2015년 제27대 노조 집행부 출범식 이후 3년 만이다.

조 사장은 새 노조 출범을 축하하면서 “이를 계기로 노사관계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간부급 인사를 둘러싼 비판을 언급하며

“그런 지적과 비판을 보다 적극 경청해 경영에 투영하겠다”라면서 “한차례 인사나 일회성 조치가 아닌,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픈 역사를 딛고,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를 딛고 연합뉴스가 새로운 출발선상에 있다”라면서 “열심히 도우면서 연합뉴스가 정말 잘하는 지 또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30대 노조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연합뉴스 30대 노조 출범과 함께 조합원들의 근로 여건과 복지를 살필 집행부도 새롭게 꾸려졌다.

홍제성 위원장과 함께 이세영 조합원(콘텐츠사업부)과 김동철 조합원(전북취재본부)이 각각 본사와 지역본부 대표 부지부장으로 선출됐다.

새 전임 사무처장에는 장동우 조합원(영문뉴스부)이 선임됐으며 총무부장, 교육부장, 쟁의부장은 김동욱 조합원(미디어개발부)·정아란 조합원(문화부)·권영전 조합원(콘텐츠혁신TF)이 각각 선임됐다. 조직부장, 조사부장, 복지부장은 이승환 조합원(융합뉴스부)·김아람 조합원(증권부)·고병준 조합원(영문뉴스부)이 각각 맡게 됐다.

홍보부장과 여성부장, 지방부장에는 김보경 조합원(정치부)·박수윤 조합원(문화부)·손대성 조합원(대구경북취재본부)이 각각 선임됐다.

새 경영진 첫 인사에서 개혁·적폐 청산 의지 '실종'

신연봉제 사원 승진인사는 전무

조성부 사장 취임 후 첫 정기 인사로 연합뉴스 내 부가 술렁였다. 새 경영진이 당초 약속한 개혁과 적폐 청산의 의지는 실종된 가운데 또 ‘그 나물에 그 밥’식 인사라는 실망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새 경영진은 지난달 단행한 간부 인사에서 박노환 ‘적폐 경영진’ 시절 김태식 조합원의 부당해고에 힘을 실어준 인사 2명에게 각각 회사 경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자리와 연합뉴스TV의 보도를 책임지는 자리를 맡겼다.

또 회사의 디지털융합 콘텐츠를 총괄·책임자 자리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국면 당시 친정부적 기사를 주문했던 인사가 승진했다.

회사는 이번 인사에서 지난 경영진의 부당 승진·승호 누락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지난해 승진체계가 처음 마련된 신연봉제 사원 가운데 승진자가 단 한 명도 없던 점 또한 회사의 격차 해소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또 편집국 내 국문부서장들은 전원 물갈이됐지만 영문부서장들은 제외되는 등 회사가 외국어 서비스 부문 인사에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 사장의 첫 인사는 신임 경영진의 운영 방향과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다. 제29대 노조는 미흡하고 방향성조차 명확지 않은 인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이번 인사는 찢겨져 피 흘리는 구성원의 마음을 안아주는 인사여야 했다”며 “지금 당장 회사를 재건하지는 못하더라도 흔들림 없는 원칙으로 최소한 복구의 기반을 닦을 수는 있는 인사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불공정·전횡 사례와 책임·관련자를 전수 조사하고 책임의 소재가 가려지는 대로 지체 없이

징계 등 조치를 밟으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제보에서 시작됩니다

위원장과 사무처장만 열어볼 수 있는 이메일(nojojebo@gmail.com)을 이용해 제보자 신원 공개에 대한 걱정 없이 제보할 수 있다.

노조 홈페이지의 ‘위원장에게 메일을’ 코너를 이용하면 익명으로 조합에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메일 주소는 @ 문자만 들어가면 된다.

올해 연합뉴스 주요 이슈가 궁금해?…노사 부속합의서 '주목'

주 52시간제 시행·임피제 시정·새 근무성적평가 마련 등

적폐 청산·공정보도 사수 외 30대 노조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는 무엇일까? 궁금하면 2017년 임단협 부속합의를 주목하자!

2017년 부속합의서는 노사가 지난해 임단협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을 추후 협의하기로 약속한 법적 문서이다. 부속합의서 2통을 작성해 조성부 사장과 이주영 전 위원장이 서명 후 노사가 각 1통씩 보관 중이다.

공식 명칭은 ‘2017년 부속 합의서’이지만 올해 3월 30일 조 사장과 이 전 위원장 간 체결됐다. 지난 경영진과의 임단협 교섭에서 미해결된 사안들이 넘겨온 것이다.

부속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격차 해소

연봉사원(신연봉제 및 1그룹 연봉사원)의 급여표를 2018.4.1자로 호봉사원 대비 92%로 상향 조정하되, 임금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100%로 격차를 완전히 해소한다.

2.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 준수를 위한 시행안을 2018년 상반기 중에 노사 합의로 마련하고, 수시연장근로·연장야간근로·휴일근무수당 개선을 위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한다.

3. 간부 사원 호봉제 전환

회사는 2018년 중에 노조 요구 시 즉각 간부 사원 호봉제 재전환과 관련한 협상을 개시한다.

4. 임금피크제

회사는 2018년 중에 노조 요구 시 즉각 임금피크제의 불합리한 요소를 시정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

5. 근무성적평가

회사는 현행 근무성적평가 제도를 즉각 폐기하고, 2018년 상반기 중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평가 제도를 노사 합의로 마련한다. 단 2018년 상반기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규에 따라 정기승호를 실시한다.

제5항의 제도 구축 기한은 노사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저녁 있는 삶' 52시간제 궁금해?...이것만은 알자!

오는 7월 1일부터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또한 새로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연합뉴스의 전(全)직원은 (기자·업무·기술직 포함) 법적으로 휴일 근로를 포함해 1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노조는 언론노조 법규국 자료를 토대로 조합원들이 궁금해할 질문들을 정리했다.

1. 평일에 총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주말에 근무할 수 없나요?

- 할 수 없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의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수 4시간씩 연장근로를 했다면 1주의 연장근로도 12시간을 다 쓴 것이고, 따라서 목·금요일은 물론 주말에도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2. 월요일 20시간, 화요일 20시간, 수요일 12시간을 근로시켜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괜찮죠?

- 안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일 연장근로는 제한이 없지만 1주 연장근로는 휴일을 포함해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월요일에 20시간을 일했다면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에 더해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모두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화~금요일까지는 1일 8시간의 기준근로만 시킬 수 있고 추가적인 연장근로는 불가능합니다.

3. 주 4일 근무만 하기 위해 하루 근로시간을 13시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근로법상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13시간으로 늘릴 경우 5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는데 그런 경우 총 연장근로가 20시간으로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초과됩니다. 4 일만 근무할 경우 1주 기준근로시간 최대 32시간(4일 X 8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합계 44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4.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1주당 기본 근무시간인 40시간 외 연장근로인 12시간에 대해 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초과되도록 일해서는 안 됩니다.

5.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킨 것이 노동부 등에 신고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근거로 사용자(대표이사)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0대 노조, 2018 지역본부 순회 첫발 내디뎈

30대 노조가 올해 지역본부 순회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홍제성 위원장·이세영 본사 부위원장·장동우 사무처장은 지난 15일 오후-17일 오전 전북본부(전주)와 대전·충남본부(대전)를 방문해 지역본부 식구들과의 면담과 만찬 자리를 가졌다.

본부별 주요 현안 및 다가오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한 아이디어, 경력입사자들의 격차 문제 해소 등 해당 본부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서울 본사와는 상이한 조직·인력 구조에 따른 인사 고충과 지역본부·본사 지방부 및 사진부 간 벌어지는 업무 지시 혼선 등의 애로 및 고충도 접할 수 있었다.

노조 집행부는 이달 말 부산·경남·경기본부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며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순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위) 지난 16일 연합뉴스 대전충남본부에서 열린 노조-지역본부 조합원 간담회 (아래왼쪽) 지난 15일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 식구들과 전주에서 가진 노조 주최 만찬 (아래오른쪽) 지난 16일 연합뉴스 대전충남본부 식구들과의 대전에서 가진 노조 주최 만찬